

북한 사회변동과 취약성: 통제, 인구, 보건복지의 융합적 이해

일시: 2026년 7월 28일 (화) 16: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619호

<프로그램>

16:00~16: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세션: “북한 지배층의 이중사고(Double-think): "말반동"과 "운명공동체"의 양면성”

발제: 주형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류민종 (전환기워킹그룹 선임연구원)

2세션: “북한의 과거 인구 복원 연구”

발제: 김기환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토론: 임재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3세션: “보건혁명과 보건복지 취약성: 체계재편, 주민생활, 인도협력 과제”

발제: 이요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토론: 윤석준 (고령사회연구원장)

17:35~18:00 종합토론 (사회: 이신화 통일융합연구원장)

신근영 고려사회연구원 연구교수

김승진 통일융합연구원 연구간사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고려사회연구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2026년 7월 28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북한 사회변동과 취약성: 통제, 인구, 보건복지의 융합적 이해」를 개최했다. 윤석준 고려사회연구원장, 임재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이신화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형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환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이요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각각 북한의 정치·사회 통제, 인구구조, 보건복지 체계의 변화를 발표했다. 류민종 전환기워킹그룹 선임연구원, 신근영 고려사회연구원 연구교수, 김승진 통일융합연구원 연구간사, 박건우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 발표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었지만, 논의를 관통한 질문은 하나였다. 북한 사회는 강한 정치적 통제 아래 얼마나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국가는 이미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를 어느 정도 다시 제도와 통제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 이를 중심으로 회의의 주요 논의를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이념적 이완과 통제 강화는 왜 동시에 나타나는가: 북한체제 안정성의 역설

주형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표 「북한 지배층의 이중사고(Double-think): '말반동'과 '운명공동체'의 양면성」은 북한을 일사불란한 통제사회로 보는 외부 이미지와 실제 북한 사회 내부에서 관찰되는 이완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일반 주민의 일탈과 비공식 경제활동을 다루어왔다면, 주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질문했다. 이를 위해 당·정·군 및 문화계 출신 고위급 탈북자 24명을 인터뷰하고,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히든 트랜스크립트(hidden transcripts)' 개념을 통해 공개적인 충성의 언어와 비공개 공간에서 드러나는 실제 인식을 구분했다.

인터뷰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 약화, 물질주의의 확산, 체제와 지도부를 사적으로 비판하는 '말반동',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당과 국가의 배급체계보다 시장을 통해 살아남은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 이념적 충성보다 경제적 이해가 행동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반 주민의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 일탈을 감시해야 할 국가보위기관 관계자들 역시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물질주의, 비공식적 체제 비판과 외부문화 소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식 담론과 실제 인식 사이의 괴리가 지배기구 내부까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발표와 토론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이러한 이념적 이완이 왜 체제 붕괴나 조직적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는가였다. 주 교수는 이를 '당근과 채찍'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지배 엘리트에게 현재 체제는 특권과 생존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체제가 붕괴할 경우 자신들의 지위 역시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운명공동체(community of destiny)'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를 반드시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자신의 운명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할 수 있다.

지정토론자인 류민종 전환기워킹그룹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러 군사협력과 군수물자 수출 등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의 일부 여건이 개선되고 국영상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시대 사회적 완충지대로 기능했던 지하경제의 역할이 김정은 시대에는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했다. 이는 시장을 묵인하는 통치와 시장을 다시 국가 관리하에 편입하려는 통치 사이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종합토론에서 신근영 고려사회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배층의 '이중사고'가 체제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오히려 체제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지를 질문했다. 공개적으로는 충성하면서 사적으로는 비판하는 행태는 한편으로 체제에 대한 내적 신념이 약해졌다는 증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이 공개적 저항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적응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승진 통일융합연구원 연구간사는 인터뷰 대상자가 탈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본편향 가능성을 제기했고, 박건우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적인 민란이나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형민 교수는 북한에는 종교단체, 학생조직, 노동조합처럼 불만을 집단행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과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사실상 제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불만과 일탈이 확산되더라도 이를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할 조직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통제 강화 자체를 오히려 사회적 이완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북한을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전 기름이 흘러 있는 상태"에 비유했다. 즉 체제 불안정의 사회적 조건은 축적될 수 있지만 이를 정치적 위기로 전환할 계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논의가 보여준 핵심은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통제가 강한가, 약한가'라는 단선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념적 충성은 약화되고 시장과 외부정보의 영향은 확대되는 반면, 정치적 조직화의 공간은 더욱 강하게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완과 통제 강화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북한 체제의 지속성 역시 바로 이 역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인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와 데이터 취약성

두 번째 주제는 김기환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북한의 과거 인구 복원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저출산·고령화나 노동력 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 인구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 통계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중앙통계국, 유엔, 한국 통계청과 기존 연구자들의 장기 인구 추계가 존재하지만, 특히 1950~70년대의 사망자 수가 장기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등 실제 역사적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시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보고, 평균수명으로부터 연령별 사망확률을 추정해 뒤 2008년의 인구구조를 과거로 역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Heligman-Pollard 모형을 활용하여 연도별·연령별 사망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인구를 한 해씩 거슬러

복원했으며, 그 결과가 1993년 센서스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통해 모형을 검증했다.

이러한 역추정 결과는 기존 추계와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다. 1957년 북한 총인구는 약 816만 명으로 추정되어 북한 중앙통계국이나 유엔 추계보다 낮았고, 인구피라미드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 인구 손실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사망자 규모는 약 68만~88만 명, 초과사망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일부 연구·단체가 제시한 수백만 명대 추정치보다 낮은 반면, 기존 학계의 비교적 보수적인 추정범위와는 보다 가까운 결과였다. 다만 발표자는 전쟁 직후나 고난의 행군기의 자료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현재 모형이 계속 보완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정토론자인 임재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북한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2008년 센서스를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둘째,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 고난의 행군 초과사망 규모가 일부 외부단체의 훨씬 높은 추정치에 비해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 셋째, 이러한 과거 인구 복원이 현재 북한의 고령화와 향후 인구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였다.

종합토론에서 이신화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사망자 추계의 큰 편차 자체가 북한 연구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고령화와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한 함의를 질문했다. 신근영 연구교수는 이 연구가 단순히 과거의 인구 규모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령구조, 노동력, 군사자원, 부양부담 및 복지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승진 연구간사는 2008년 센서스 이후,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기존 모형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김기환 교수는 2008년 센서스가 유엔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조사가 아니라 조사 설계와 집행에 직접 관여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2019년 이후에는 신뢰할 만한 실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인구를 기존 시계열의 연장선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유엔이나 통계청이 제시하는 미래 인구 역시 결국 2008년 자료를 기초로 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중요한 함의는 북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취약성'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감소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인구자료 위에서 정교한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 역추정뿐 아니라 위성영상, 지역별 공간자료, 탈북민 자료 등 상이한 자료원을 결합해 상호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구조는 단순한 사회정책 변수가 아니라 노동력, 군 병력의 동원 가능성, 경제성장, 사회보장 재정과 의료수요를 동시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장기적 국가역량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3. '보건혁명'은 복지 확대인가 국가의 재진입인가: 시설 건설과 운영역량 사이의 간극

세 번째 주제는 이요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보건혁명과 보건복지 취약성: 체계재편, 주민생활, 인도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교수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보건혁명'을 병원 몇 곳을 새로 건설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방발전 정책, 보건의료 재정, 의료산업, 디지털화와 국가의 사회통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체계 재편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시·군병원, 양곡관리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및 생활시설로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20개 시·군에 병원을 건설해 10년간 200개 지역의 병원 인프라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정책의 변화는 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제약공업과 의료기기 생산, 의료인력 양성, 병원경영 정보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 활용 등 의료체계 전체의 현대화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던 '무상치료제'가 최근 헌법과 공식 담론에서 사실상 퇴장하고, 그 대신 개인과 기업의 기여를 포함하는 '보건보험기금'이 등장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정토론자인 윤석준 고려사회연구원장은 과거 북한이 '무상의료'를 체제 우월성의 핵심 선전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붕괴한 무상의료 체계를 최근의 '보건혁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그는 특히 '보건보험기금'이 등장한 것이 북한 보건체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액부담형 의료에서 사회보험형 모델로 전환하는 신호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 여건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당시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했던 북한이 이후 중국·러시아와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변화 역시 논의되었다.

이요한 교수는 최근의 변화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에 넘겨졌던 보건의료 기능을 다시 국가가 일정 부분 회수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의료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보편의료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상당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변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던 의약품을 국가가 표준화해 유상 공급한다면,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자원과 기능을 다시 국가의 공식 제도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약값 등을 통해 지하경제에 축적된 민간자본의 일부를 공적 재정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북한의 시설 건설 능력과 체계 운영 능력 사이의 격차였다. 북한은 정치적 동원체제를 통해 병원 건물과 각종 시설을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만, 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의약품, 의료기기, 전력, 숙련된 의료인력, 정보관리, 유지보수 및 재정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이 하드웨어를 건설하고 지방이 운영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오히려 다른 형태로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역시 병원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영양·식생활, 1차의료와 예방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신근영 연구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북한 보건 문제의 핵심이 “더 많은 병원을 건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시설과 의료자원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연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인지 질문했다. 김승진 연구간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의료물자 조달이 확대될 경우 공급원이 다양해지는 것이 오히려 기술·장비의 호환성을 낮추고 보건체계의 파편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요한 교수 역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물자를 확보하는 능력에 비해 이를 운영·통합하는 역량이 부족하며, 학습·교육·유지보수를 담당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핵심적인 공백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북 보건협력의 방향 역시 단순한 물자 제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데 논의가 모아졌다. 이요한 교수는 북한이 여러 경로로 확보하는 장비와 물자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구의 기술자문, 의료인력과 운영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의료·기술 지식을 북한이 정치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플랫폼’ 방식 등을 제안했다. 과거 한국이 제공한 첨단 의료장비가 전력 부족과 유지·보수 역량의 부재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경험 역시, 향후 인도협력이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운영체계와 사람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종합: 북한의 핵심 취약성은 ‘통제 의지’와 ‘통치 역량’ 사이의 간극

종합토론에서 세 주제는 결국 북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과 북러 관계 강화 등을 통해 대외적 안보 자신감을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외부정보의 유입, 시장화, 인구구조 변화, 기존 사회주의 복지체계의 기능 저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주형민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핵 관련 국내 메시지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최근 보건정책의 강조 역시 외부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내부 주민을 관리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신화 원장 역시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과 대남 적대노선을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과 한류 등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보여준 것은 북한을 단순히 '강한 국가'와 '취약한 사회', 또는 '안정된 체제'와 '붕괴 직전의 체제'라는 이분법으로 분석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배층의 이념적 신뢰는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화가 진행되었지만 국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자원과 기능을 다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의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동시에 압박하며, 보건 분야에서는 대규모 시설 건설과 현대화가 추진되는 반면 이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운영역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을 분석하는 핵심 질문은 국가가 얼마나 강하게 통제하려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변화한 사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시 관리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 북한의 취약성은 단순히 국가역량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통제 의지와 제한된 집행능력 사이의 불일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충성, 인구구조, 보건복지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사회 관계의 재편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지표이다. 향후 북한 사회의 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영역을 연결해 보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